

데스크시각

우리가 알고 싶은 당신들의 비밀



윤영기  
여론특집부장

최근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변경협약서를 구해 읽어보았다. 협약 당사자는 맥쿼리 한국 인프라투융자와 광주시로 지난 2016년 12월 기존의 협약을 바꿔 체결했다. 의혹의 핵심은 협세를 줄이기 위해 재협약에 나섰음에도 광주시가 업체에 지불하는 재정 지원금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19억 원 더 지출됐다는 것이다. 추가 지출에 대한 의문은 맥쿼리 측과 광주시 간 이번 계약 존재 여부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협약서는 한 공무원의 죽음으로 물고갔던 문건이지만 아직까지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양측이 서명한 협약을 훑어보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협약의 내용이나 이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 협약 당사자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협약서 하단에 '기타 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보안 계약' 왜 남발되는가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이 지난 2017년 서명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양수도 계약서'도 '오픈' 사례라 할 만하다. 도의회와 언론에서 지난해 10월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계약서 공개를 촉구하자 전남개발공사에서 의원들에게 내놓은 것은 (비밀 유지)각서였다. 결국 의원들은 변호사 인회하여 문서를 들여다보아야 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비밀 엄수 조항은 공의 차원의 검증과 접근권까지 차단하는 꼴이 됐다. 공공사업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처럼 다루진 것이다. 문화 기관도 비밀 협약에 예외가 아니다. 아시아문화원이 지난해 한 재단과 체결한 협약을 보면 이와 유사한 조항이

들어 있다. "양 기관은 상호 업무 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배포·누출하지 아니하며, 이는 협약 종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진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인데 정부 산하 기관의 협약서마저 이렇다.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는 공공사업의 특성상 관례적으로 넣는 비밀 조항을 가지고 괜히 트집 잡는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기업이 특허 기술 등 보호해야 할 정보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최소한 견제 심리도 없는 무감각적인 남발에 있다. 기업 입장에서 공공 기관이나 자치 단체는 이익의 분배를 다루는 사업 파트너일 뿐이다. 기업이 태생적으로 약세자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가 그렇다. 기업이 파이를 키우기 위해 계약서 곳곳에 전략적 문구와 조항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기업과 맺은 계약서를 비밀에 묶어 두면 공적 검증이 불가능해진다. 공공 기관이나 자치 단체가 업체에 제공한 '해택'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눈먼 돈이 된다. '협세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는 제2순환도로가 대표적이다.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애초 사업 목적과 달리 골프장만 짓고 만 '여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다. 어김없이 해당 업체와 협약 내용에는 정보

누설을 금하는 '보안 의무'가 포함돼 있다. 어등산 사업을 들여다본 감사원은 "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를 강제하는 보안 조항이 필요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연하다. 협약서를 볼 수 있는 당사자는 관련 공무원과 업체뿐이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도 있으나 마나

공공 기관이 사기업과 체결한 협약(계약) 문서에는 양측의 설편이 담겨 있는데, 이는 기업에 일정 이윤을 보장하고 받은 공익의 질과 양을 따져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이기도 하다. 한데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자치 단체가 '비밀 계약'을 남발하게 되면 사업의 대차대조표를 감추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보호해야 할 비밀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 절차도 없이 계약 전체를 몽둥그려 비밀로 봉인하는 것은 밀실 행정이다. 공공 기관에서 비밀은 매우 제한적으로 분류되고 관리돼야 한다. 비밀 유지 조항이 들어간 문서에 무분별하게 사인하면 정보 접근권 차단은 물론 사업자의 탐욕까지 은폐하는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과 공익 제보를 용이매는 촉쇄로 작용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 사회에서 '제도화한 은폐'는 공공의 적이다.

/penfoot@kwangju.co.kr

은펜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직장 민주주의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작년 9월 이후 국회에 묶여 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행히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부터 대책까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게 됐다. 법안의 시행일은 올해 7월 16일부터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지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의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 규정 포함시킨 산업 안전 보건법도 같이 처리됐다. 이어 지난달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범포에 급지되었지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괴롭힘 사건이 생겼을 때 그 해결 방법은

이렇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에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결국 직장 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사내 규정과 구제 및 예방에 필요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성원 각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직장이라면 괴롭힘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제 직장 민주주의다. 사회적인 차원의 직장 복지와는 다

른 개념이다. 직장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부단한 노력만이 이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 촛불로 정권 교체를 이룬 경험을 가진 국민이 직권이다. 아직 그 촛불은 직장 안으로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 최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개인이 아닌 사회 구성원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해나가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출근이 기다려지지 않는 오피스 워커 직장,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곳, 부당한 지시와 요구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직장의 상하 관계가 인생의 상하 관계가 아님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곳, 내부 경쟁을 협력으로 전환시키는 곳. 이런 직장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많지는 않다. 이런 것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사장, 부장, 과장, 대리, 평직원이 모두 모여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끊임없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직장 민주주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민주주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社說

오늘 조합장 선거, 공약 잘 살펴 소중한 한 표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늘 치러진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시행되는 이번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게다가 농어촌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행사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203명을 새로 뽑게 된다. 광주의 경우 18개 선거구에 51명이, 전남은 185개 선거구에 442명이 최종 후보로 나섰다. 평균 경쟁률은 광주 2.8대 1, 전남은 2.4대 1. 이들 후보자들은 어제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을 마치고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조합원으로 구성된 선거인 수는 광주·전남을 합쳐 모두 36만 89명인데, 유권자들은 272곳의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한 동시 선거 방식이 도입됐지만 금품 제공 등 불법과 탈법 행위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그동안 선관위가 적발해 고발하거나 경고 조치한 위반 행위는 광주 20건, 전남은 59건에 이르고 있다. 선거가 이처럼 혼탁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조합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4년 임기의 조합장은 조합 규모에 따라 수천 만 원 내지 억대에 이르는 연봉을 받으며 직원 인사권에 업무 집행권까지 갖고 있고,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관여한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는 만큼 표, 한 표가 큰 영향을 미친다. 조합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열연과 자연에 얽매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 공약이나 능력을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합 운영과 농어촌 활성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헬기 사격은 엄연한 사실 정치 논쟁 될 수 없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무등맨션 4층에 거주하던 김선호(사망 당시 45세) 씨는 1980년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일어나자 10층 옥상에 올라가 금남로 쪽 상황을 살펴다다 잡자기가 날아온 총탄에 맞고 숨졌다. 당시 김 씨의 시신을 고향집으로 운구한 바 있는 김영이(69) 씨는 "김선호 씨가 총을 맞은 위치가 금남로에서 다소 비껴난 무등맨션 10층이었고, 당시 헬기 두 대가 전남도청 상공을 선회하고 있던 것으로 미뤄 헬기 사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실한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김 씨는 조비오 신부를 만나 김선호 씨의 상황을 알렸더니 조 신부 또한 '헬기 사격이 틀림없다'며 분개했다고 전했다. 실제 계림1동 주민센터가 5·18 직후 광주시에 보고한 '광주사태 피해상황 접수대장'에도 '김선호 씨는 5월21일

무등맨션에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다. 시민 조광영(79) 씨도 "5·18 때 도청 상공에 헬기 2대가 날고 있었다"며 헬기가 조선대 뒷산부터 금남로 인근 등 여러 곳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으로 기억했다. 헬기 사격은 전두환의 광주 학살을 증명할 스모킹건이다. 헬기 사격이 인정되면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논리가 근거를 잃게 되고 이는 누군가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이 되기 때문이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씨 측이 5·18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정치적·논쟁적 사안'으로 몰고 가려는 전략을 펼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정치 논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헬기 사격을 규명한 국방부 조사 보고서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 남은 100여 발의 탄흔이 지금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無等鼓

과거 한자 문화권에선 연호(年號)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햇수를 헤아리는 것이 연호인데, 통상 새로운 왕이 취임한 해를 기준으로 시작한다. 기원전 140년 중국 한무제(漢武帝)가 건원(建元)이란 연호를 사용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우리나라에선 고려 개국 광개토태왕 때 영락(永樂)이란 연호를 처음 사용한 후 고려 전반기까지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지만 차차 중국 연호를 썼다. 독자적인 연호가 다 시 등장한 것은 대한제국 때다. 고종이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光武)를, 순종이 이후 1910년까지 융희(隆熙)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가장 유명한 연호는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삼는 서력(西曆)이다. 지구촌 모든 사람이 올해를 2019년이라고 표기하는데, 이것이 서력이다.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다. 근대 이후만 보더라도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쇼와(昭和)→헤이세이(平成)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연호인 헤이세이는 아키히토 일왕이 1989년 즉위하면서부터

사용하고 있다. 헤이세이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지평천성'(地平天成)에서 따온 것으로 '온 누리가 평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어린 시절 전쟁을 겪은 아키히토 왕이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을 담아 지었다고 한다. 아키히토는 최근 열린 마지막 제위 기념식에서 "근현대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시대였다"며 "일본이 성의를 갖고 타국과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키히토는 어제 아마테라스를 찾았다. 선왕들에게 절한 것을 시작으로 한 달 보름간의 퇴위 의식을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으 로 4월 30일 퇴위식을 마치면, 5월1일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한다. 벌써부터 다음 연호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루히토의 연호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오는 4월1일 공개될 예정이다. 선왕의 뜻을 계승한다면 나루히토도 평화를 모토로 내세울지 모르겠다. 일왕이 아무리 상징적인 인물에 불과하다지만 새 연호가 국수주의자 아베의 우편향을 바로 잡는 구심점이 됐으면 한다. 더불어 최악의 상태인 한일 관계의 개선도 기대해 본다. /장필수 전남부부장 bungy@

아듀, '헤이세이'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燦</b>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행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소통 철학



임채영  
전남도 자치행정국장

'소통'을 한자로 풀이하면 트일 '소'(畝)와 통할 '통'(通)이 합쳐져 '막힘이 없어질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트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소통이 수없이 강조되었지만, 여전히 화두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반증일 것이다. 민선 7기 전남도가 출범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직자 모두는 내가 도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도민 의견을 경청하여 함께 문제를

풀어가라'며 '현장 소통'을 역설하였다. 본인 스스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수시로 현장을 찾고 있다. 기존 전라남도의 소통은 '전문가'와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김지사의 도정 운영 철학에 맞춰 직접 도민을 찾아가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도지사가 마을을 직접 찾아가 민가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생활 현장을 돌아보고 현안에 대해 대화하는 '민박 간담회' 신설이 대표적이다. 일정의 제약 없이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허심탄회한 토론에 참석한 도민들도 반색하고 있다.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신안 새우 브랜드화, 전통시장 대표 특화 상품 개발 등 도정 현안 과제들을 발굴하는 성과도 내고 있다. 작년 9월 담양 옥산마을의 친환경 농업인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순천 소상공인, 신안 압해 어업인 간담회 등이 열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다음으로는 권한 대행 체제인 탓에 지난 2년 동안 중단되었던 '도민과의 대화'가 지난날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기존 틀에 맞춰진 의례적인 절차는 없애고, 대신 진솔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현장 대화'가 대폭 강화되었다. 딱딱하게 느끼기 쉬운 '도정 보고' 역시 도민 눈높이에 맞춰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개선하였다. 주민들도 변화된 '도민과의 대화'에 적극 호응하면서 대화 공간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또한 지역민과 소통을 위해 정책 제안, 결정, 시행 등 행정의 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정)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누구나 일일에서 실제로 느낀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치열한 토론과 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 모든 과정을 전남도가 아니라 온전히 도민들이 주도한다. 이미 시행하고 있

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혹은 보완 사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코너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정 참여를 위한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속의형 협치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정 내부에서도 여러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관행을 벗어나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설명하는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전공대 유치', '국고 예산 6조 8000억 원 확보' 등 최근 도정의 괄목할 만한 성과들은 모두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록 정책은 정교해지고 그 효과는 도민 생활 깊숙이 스며들게 될 것이다. 도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변화와 혁신'은 '도민 행복시대'를 앞당기고, 소통은 '오픈 전남'을 실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